

**【 2015.03.13(금) 강원일보 】**



**대한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정동기)는 12일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정기총회 일정을 결정했다.

**【 2015.03.13(금) 강원도민일보 】**



**건설협회 도회 제1차 운영위원회** 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는 12일 오후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 2015.03.13(금)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2015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정동기)는 12일 강원도 춘천 도회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14회

계연도 결산안 심의 및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한편 제57회 정기총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30분 춘천 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에서 열린다.

# 1400억원대 경원선 복원공사 연내 발주될까

경원선 철도의 남측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이 정치권에서 대두되면서 연내 공사발주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검토단계이긴 하지만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최근 경원선 복원공사를 연내에 시작해 2017년 말 완료한다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원 공사 구간은 백마고지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0.5km 구간이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신탄리~백마고지(5.1km)까지 복원, 개통했다.

경원선 복원은 개통 100주년을 치는 지난해 박 대통령의 '우리아시 아니셔티브' 선언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김무성

## 국토부·철도시설공, 기술조사 집중... 검토 단계 정치적 역학관계 따라 급물살 탈 가능성 높아

새누리당 대표는 "경원선 복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남북 SOC 연결사업 본격화를 추진하면서 경원선 복원을 포함시켰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지난 1월31일 백마고지역을 방문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등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면서 "경원선 복원 등 남북철도 연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르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 착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검토단계에 불과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실행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은 일종의 기본계획인 기술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내달 완료되는 기술조사에서는 노선 등이 확정된다. 이후 설계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도 아직 확보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결정된다면 하반기 착공도 어려울 것만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술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책방향이 확정되면 예산 확보 문제 등을 포함해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부담도 없다. 경원선 복원 공사는 정부가 1993년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후 1998년 한 차례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번 기술조사 결과 노선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기존 실시설계를 활용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시된다. 이번 경우 통일준비위원회의 보고 대로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복원구간 대부분이 논이나 밭이어서 고난이도 공사나 특수공법이 요구되지 않으며, 일부 부지는 매입을 완료한 터라 건설공사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총사업비는

14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총 10.5km 구간 중 2km 정도는 비무장지대(DMZ)에 속해 북한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간인 통제구역 안의 8.5km 구간은 자체적으로 우선 건설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경원선이 연결돼 열차가 달리려면 북한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측 구간이라도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원선 남측 구간은 길이가 짧아 결정만 빠르면 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해 개통식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 DMZ 개발에도 기록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원선은 1914년 개통해 운행되다, 한국전쟁으로 단절됐다. 경원선이 완전 복원되면 서울 용산역에서 북한 원산까지 이어진다. 정희훈기자 hoony@

# 원주~강릉 철도 전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논란

## 업계 "국가계약법 따라 245억원 미만 공사 적용해야" 철도공 "준정부기관 아냐... 기재부 유권해석 따를 것"

철도시설공단이 강원 지역에서 발주할 예정인 철도 전기공사를 놓고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 업체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넓혀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갑작스러운 주장에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 총 17건, 2284억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고 총사업비와 관련해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5월부터 공사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철도시설공단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축소 적용하고 있다는 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지적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정부 행정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임에도, 중앙 행정기관 발주공사에만 시행되는 추정가격 7억원 이상 82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은 계약사무규칙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규칙에 없는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철도시설공단은 다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24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는 2년마다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금액이 결정되는데, 올해는 245억원 미만의 공사가 기준이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자신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계약사무규칙 별표1에 대상 16개 기관 중 철도시설공단의 이름은 빠져 있다.

그러나 계약사무규칙은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관계가 없다고 협회는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사무규칙에 나와 있는 16개 대상 기관은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명시하고 있을 뿐, 지역의무공

공동도급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계약사무규칙 대상이 아니라 해서 철도시설공단을 정부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총 17건, 2284억원 규모의 전기공사 중 어떤 식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업체의 몫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철도시설공단의 규정대로 82억원 미만을 적용할 경우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은 2200여억원 중 4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협회 주장대로 245억원 미만을 적용할 경우 최소 524억원 이상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 무려 11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유독 이번 원주~강릉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해 그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 강원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시동

## 자문위원회 출범

강원도가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강원발전연구원 콘퍼런스룸에서 연구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과 건축도시사회분야 전문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건축기본계획에 대

한 공론형성과 강원도에 적용가능한 건축정책 기본방향설정 분야별 주요경점과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총 12명으

로 국가 건축정책의 반영을 위한 중앙전문가 6인 및 지역현황에 밝고 연구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자문내용 반영 확인 등을 위해 앞으로 2~3회 워크숍을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정희훈기자